

##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문제 고찰

정재홍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주요내용

- (현황) 4월25일 사드 장비 일부를 성주 롯데골프장 반입과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 민주성, 효용성, 정당성 논란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해 다시금 사드 배치 문제에 논란이 불거짐.
- (원인과 분석)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강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함.
- (전망과 시사점) 지난 정부에서 내부적 조율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된 사드 배치문제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국민적 합의, 법적절차를 통해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중관계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됨.

### 1. 이슈 현황

- 지난해 7월8일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주한미군 방어 차원에서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4월 25일 사드 일부 장비를 성주 롯데 골프장에 반입하였으나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사드 배치 문제의 민주성, 효용성, 정당성, 유해성 논란 등이 다시금 불거짐.
-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졸속 처리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국민적 합의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힘.
  - 현재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북한의 도발억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국협력 공고화,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찬성여론과 한중관계악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보복, 신 냉전 출현 도래 가능성을 주장하는 반대여론과의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이번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 한미 국방 당국 사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조약이 아니고 국회나 헌법재판소 규범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합의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달리 국가안보문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안보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필히 국민적 합의 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임.

■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선거 유세기간 동안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국민적 합의 등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환경영향평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됨.

- 지난 5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 특사단 대표들과 만남에서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하였고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누락되면서 추가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 논란이 한층 복잡해지기 시작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일부 실무진 내부 조사, 국민적 합의 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물론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상황이고 이미 성주에 일부 사드장비가 배치된 상황에서 완전한 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공표한 이상 한미, 한중관계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됨.
  - 한편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시와 사드 배치 잠정 중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일정부분 개선될 여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사드 배치 추진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실질적 협상도 충분히 가능함.
    - 미중간 역내 패권경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중간 균형자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편에 동침하여 최종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 여전히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첨단전략무기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리한 사드배치 추진은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 특히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MD)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위험한 결정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주변국(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 몽고, 인도 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사드배치가 대북 억지력 차원과 한미동맹을 넘는 결정으로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와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한편 중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소통, 6자회담 추진과 같은 외교적 협상과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이후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철회를 요구함.

- 이번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발표 이후 중국 역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드배치를 기정 사실화한다면 중국 역시 다양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갈등과 압박이 예상된다.
- 이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가 모든 책임부여, 중국의 보복 조치에 이의 제기 불가” 등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밝힘.
-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게 어떠한 사전 언급도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크게 실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사드가 철수 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차원의 정치-외교-경제적 압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2. 원인과 분석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드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조만간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함.

-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환경영향평가와 국민 이해와 설득이라는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며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한 재검토 추진을 제시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과 외교적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지시함.
- 한편 먼저 사드 배치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 해나가면서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밝힘.

-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불 사드 청구 비용 요구 이후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사드 비용 재협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비용으로 10억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부적으로 강한 반발로 이어졌으나 당시 한국 국방부는 사드 비용 부담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해 합의된 사안으로 재협상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 위원장은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내년도 미군의 아태지역 예산 21억불을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이중 가운데 역대 미사일 방어 비용으로 10억불이 배정됨.
- 아울러 미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약 21억불 국방예산을 추기로 배정하는 인도-아시

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HR-2621)을 발의하였으며 동 예산에는 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역내 미사일 방어망(MD) 무기 구입비용(사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주요 정부 지도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드 배치 철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 사드 배치 철회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로 인해 현재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함.
  -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중국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 방중 특사단을 맞이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직접 “사드 배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신정부가 중국의 우려사항을 존중해 철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함.
  - 한편 6월20일 G-20 한중 정상회담 사전 조율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차관과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 "(사드배치문제)에 있어 한국이 정치적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며 중국과 함께 해당문제를 해결하여 양국관계가 조속히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진 장예쑤이(張業遂)외교부 부부장과와의 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제약하는 주요장애물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 철회를 다시금 압박함.

■ 금년 하반기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무엇보다 사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대외 안보 현안으로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권력 공고화 및 군부 개혁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 피함.

- 지난 몇 년 간 반부패 투쟁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사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권력 체계 공고화 및 반부패 투쟁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동시에 대외 정책노선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반부패 투쟁을 통한 강력한 군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군부 내부 불만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다가오는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1인 지배체제 공고화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인 성과 차원에서 사드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한국의 사드배치를 놓고 어떠한 대응과 해결없이 넘어간다면 국가적 위신문제, 국민 여론 악화, 중국의 주변국들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 등을 갖고 있어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각종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사실 중국은 사드 요격미사일 보다 AN/TPY-2(X-band)레이더를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는 중국이 보유한 동평(DF)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기지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 정보(위치, 각도, 속도 등)를 탐지하여 주일 미군기지, 미 태평양 사령부, 미 전략 사령부에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어 자국의 미사일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히 지난해 한·미 양국군은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AMD-Cell)과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LINK)-16 시스템과 연결이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탄도 미사일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 한편, 사드 AN/TPY-2(X-Band) 레이더 배치되고 가동된다면, 중국이 보유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식별능력 정확도가 급격히 향상될 것이고 동시에 조기 경보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중국의 핵/미사일 공격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 **최근 미중간 상호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AN/TPY-2 레이더의 탐색 범위 내에 중국의 심장부인 북경지역, 발해만, 동북3성, 산둥성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지점 등이 노출될 것을 심각히 우려함.**

□ 이미 일본에 2기의 AN/TPY-2(X-band) 레이더가 배치된 상황에서 한국 성주에 AN/TPY-2(X-band) 레이더가 추가로 배치된다면, 중국이 보유한 각종 위장미사일 (decoy) 및 탄도미사일 식별 정밀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며 조기경보능력도 급격히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임.

- 특히 지난 몇 년 간 미군의 육·해·공군 감시정찰 자산과 인공위성, 우주기반 정찰역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X-band 레이더가 중국과 가장 근접한 한국에 배치된다면 중국 동북 3성에 주로 배치된 각종 중·장거리 ICBM(미국본토용) 공격능력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최근 중국도 핵/미사일 정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동식/우주기반 통신기술, 지원체계의 지휘통제 및 정보전 기술 전환, 광역 및 지구적 통신네트워크, 민간 및 특수네트워크 병용, 군사통신체계의 군사정보체계 전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아태재균형 이후 중국은 남/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에서 상당한 군사안보적 압박과 포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사드배치는 한미일 3국 군사안보협력 및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의 촉매제가 되어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 인식함.**

□ 현재 중국은 '선제 핵불사용(no first use, NFU)' 기조 하에 상대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시 핵 반격에 나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드가 배치되고 미국 주도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이 구축된다면 기존 핵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특히 미국은 약 6,000여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전략 로켓군(과거 제2포병)이 운영하는 약 300여개 핵미사일만을 갖고 있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이 구축된다



면 미·중간 ‘핵 공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봄.

- 따라서 향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 무력화를 위해서는 과거 소련처럼 미국과의 핵 군비경쟁을 벌여야 된다는 매우 심각한 안보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미국의 대중포위망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에 동참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어 중국의 과도한 인식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이미 중국 역시 주변국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추적하여 레이더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레이더 대응 요격미사일(ASN-301)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S-400 체계를 확보하고 하층방어를 위한 S-300과 HQ-9 체계를 구매함.
- 특히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OTH 레이더(감시거리 3,000km)를 배치하였으며 미국의 F-22와 F-35를 감시할 수 있는 패시브 레이더(DWL-002&YLC-20)도 조만간 실전배치하여 운영에 들어간다는 밝힘.
-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군사-기술적 차원 못지않게 한미동맹 분열과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 무력화에 전략적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음.

### 3. 전망과 시사점

■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모두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드배치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소한 한·중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망됨.

-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철회한다면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각종 제재와 보복을 철회하고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 철회가 될 때까지 한·중 관계 개선과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금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중국 역시 한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악화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나 이미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 내부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중 모두 수용 가능한 ‘절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 한편 미국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 및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데 대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추진되었다”고 불편한 입장을 보이면서 사드 배치 철회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내비침.

■ 중국은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 절차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지시 등을 놓고 다소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당분간 사드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각종 보복과 압박이 예상된다.

□ 현재 중국은 기존 단계별 보복 전략인 '등가대응(tit-for-tat)'방식을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드 배치와 경제적 보복은 별개 사안이며 오히려 한국이 기존 약속과 원칙을 어기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였다는 논리를 갖고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내 반한/협한 감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한국 관광 중단,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한류 중단, 협한/반한 시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 스스로 자초한 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임.
- 한편 그동안 중국이 경제 위주로 보복과 제재를 취해왔다면 점차 북중관계 강화, 대북제재 이탈,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방치, 첨단무기 한반도 인근 배치 등 외교안보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한·중간에 사드 배치 문제 이상으로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며, 한·중 모두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함.

□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드 배치 절차를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추진해 나간다면 중국 역시 한·중 관계개선 차원에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점차 줄여 나갈 가능성도 존재함.

- 특히 이번 한국의 사드배치가 중국과의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입장과 체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군사-안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 불만까지 축적되어 있어 한중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임.
- 한편 지난 25년 동안 한·중간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정치·경제·외교적 성과들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서물거품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추진과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보복과 압박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망됨.
- 더욱이 향후 한국에 대한 과도한 중국의 제재와 각종 보복 조치는 오히려 한국 내 반중정서 고조,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중국 이미지 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은 한국 내 사드배치를 한미일 3국 안보동맹 및 미국 주도 역내 미사일 방어망(MD)의 추진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미·중 3자 협의체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과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다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미·중 3자간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함.
- 그동안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 한·미간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견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중 3자간 전략적 불신이 깊은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
- 만약 향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상호간 안보적 우려 문제에 대해 한·미·중 3자가 보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면 일정 부분 타협 방안 도출도 충분히 가능함.


■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은 한국을 확실하게 보복과 압박을 가하여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 점차 나타남.**

- 현재 사드 문제에 있어 한·중간 근본적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한·중간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시간이 갈수록 정치/외교적 대립과 감정적 기싸움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은 사드배치 문제와 한·중 관계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새로운 투트랙(Two Track)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중간에는 사드배치 문제 이외 북한 핵/미사일 방산 등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적대적 대결구도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투트랙(Two Track) 접근법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 더욱이 최근 북한은 화성 12호, 북극성2호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북한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설명하고 사드 문제 해결과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 담당자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비공개 1.5트랙 회의 등을 중국에 적극 제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보복과 제재에 있어 한국 역시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맞대응이 필요함.**

- 여전히 중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더 이상 중국의 보복과 제재가 사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이 중요함.
- 특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반한감정 확대, 북한 핵문제 공조이탈과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한·중 관계의 증장기 로드맵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 한편 현재 한·중간 경제무역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어 중국이 경제보복을 지속한다면 중국 역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사드 문제와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안이 요망됨. 

#### 참고문헌

- 정재홍,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고찰: 사드배치를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통권 제9호(2017).
- “한국 신 행정부출범 이후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세종정책브리핑』 2017-9호(2017).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